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3 No.1 (2019 Spring) http://dx.doi.org/10.20484/klog.23.1.1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 추이와 그 함의(1970-2018)*

김 대 래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70-2018년 부산인구의 역외 전출입을 분석한 것이다. 전출입에서 분수령적 의미를 갖는 연도는 1989년이었는데, 그 이전까지 부산은 항상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았다. 그러다 1989년을 전기로 전출초과로 바뀌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이래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부산경제의 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부산으로들어온 전체 전입인구 가운데 경남이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4%의 경북이었다. 그리고 서울이 11.6%, 경기 6.9%, 전남 6.7%의 순이었다. 부산에서 나간 전출인구는 경남 40.8%, 서울 17.8, 경상북도 9.2%, 경기 9.1%, 전남 4.6%의 순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역외전출입은 부산인구의 출신지별 구성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인구에서 경남과 경북이 높은 비중을 점하게 되고 그 뒤를 호남인구가 잇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구구성은 부산의 정치성향과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남 다음으로 많은 전입이 있었던 서울출신 비중이 부산인구 비중에서 매우 낮은 것은 서울출신들의 경우특이하게도 부산으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서울이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경남의 경우 전입과 전출에서 모두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인구의 구성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남으로 이동한 인구 가운데에는 다른 시도 출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에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흐름은 수도권으로의 일방적 전출초과와 타시도로부터의 전입초과라는 상반된 경향이었다. 농촌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대신 수도권으로는 끊임없이 인구가 유출되었는데, 이것은 부산의 인적자본 축적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부산, 인구, 전출입, 정체성, 인적자본

Ⅰ. 서론

어떤 사회든 그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 즉 인구이다. 오늘날 인구는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생산요소로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일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의 담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산의 인구를 바라볼 때 중요하게 고려

^{*} 이 논문은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부산인구의 시외 전출입과 그 함축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분석기간을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하고 완전히 새롭게 작성하였다.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토론자와 유익한 심사를 해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해야 할 것은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이다.

흔히 부산은 토박이가 없는 도시라고 말한다. 이것은 부산이 도시팽창을 시작할 때 부산에 오래 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 사회정치적 변화와 산업화의 시기 에 많은 타 지역 사람들이 부산으로 들어와 오늘날의 부산인구를 형성하였다. 그런 점에서 부산인 구의 인적역량과 부산의 정체성 형성의 특수한 계기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인구들이 다 른 지역과 어떤 전출입 또는 유출입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 보면 해방이후 부산과 타 지역간의 인구전출입은 크게 3가지 계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는 해방과 함께 해외동포의 귀환과 정착이다. 둘째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피난민의 월남과 정 착이다. 그리고 셋째는 휴전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로의 인구이동기에 부산으로 몰려든 사람 들이다. 이러한 세 가지 계기가 해방이전 부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부산인구의 원형을 이루는 것이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계기에 의한 부산인구의 변동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 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방과 함께 부산에 정착한 귀환동포와 한국전쟁기 월남동포의 부 산정착에 대해서는 약간의 연구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정확한 규모나 그것이 부산인구의 원형 형 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후의 인구이동에 대해서도 연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고도성장기 의 역외 인구이동은 앞의 두 계기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인구이동의 규모가 과거 두 계기에 의한 것보다 훨씬 컸을 뿐만 아니라. 고도성장기에 이동한 인구의 상당수는 현재 부산 인구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고도성장이 본격화되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시와 여타 광역시도간에 일어난 인구의 이동 즉 전출입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1970년에서 2018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가 1970년부터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3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 하려고 한다. 첫째, 오늘날 부산인구의 원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의 일면을 파악할 것이다. 둘 째는 부산의 인구를 간접적이지만 인적자본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 셋째는 부산의 정체 성 형성에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부산의 역외 인구이동을 바라볼 것이다.

Ⅱ. 부산인구의 추이와 사회적 증가

해방이 되던 1945년 부산의 인구는 약 28만명이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해방 당시 부산 의 인구는 구(區)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해방이후 부산의 인구증가는 매우 빨라 1948년에 는 50만명을 넘게 되었다. 3년만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빠른 증가는 해방과 함께 부산항2)을 통해 들어온 귀환동포와 월남인구의 정착때문이었다3). 특히 귀환자들 가운데 상당수

¹⁾ 해방 직전인 1944년 부산부의 인구는 329.21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인이 61.081명이었다(김대래, 2005.10: 301).

가 상륙지 부산에 체류하거나 정착했는데, 그 수치는 약 22만명에 이른다 는 기록이 있으며, 이 때 문에 부산은 해방직후 단기간에 엄청난 인구증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택난, 실업난, 식 량난 등 많은 사회문제를 겪게 되었다(최영호, 2003: 7). 그리고 정부수립 이후 발발한 한국전쟁은 부산으로의 인구유입을 더욱 촉진하였는데, 정부의 강력한 부산으로의 유입억제에도 불구하고 1955년에는 100만명을 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귀환동포와 월남동포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의 부산정착이 구체적으 로 얼마나 되었는지는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표 1〉은 1955년 인구총조사 당시 조사된 것으로 1955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 중국, 북한, 일본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전입시기별 인구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1955년 현재 중국, 북한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와 부산에 살고 있는 사 람은 154,509명이었다. 이 규모는 부산 전체 인구 1,049,363명의 14.7%에 이르는 수치였다. 이것 은 해방후 꼭 10년 만에 조사된 것으로, 실제로 해방직후 및 한국전쟁기 동안 부산에 체류하였던 귀환 및 월남동포의 수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머물다가 다른 시도로 떠나가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4). 실제로 1945년 12월에 부산항 귀환 자 100.465명을 대상으로 귀향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삼랑진과 마산 그리고 부산이라고 응답 한 사람의 비율이 22.4%였다(최영호, 2003: 14).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부산에 체류하다가 고 향을 찾아 떠났다고 보여진다.

²⁾ 해방직후 부산항은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퇴거하고 일본에 있던 한국인이 귀환하는 통로였다. 이는 불가피하게 많은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일시적이라도 부산에 체류하게 하였다. 선편의 확보에 따라 귀환 일정이 좌우되었던 일본거주 한국인들은 부산으로 귀환한 뒤 대부분 고향을 찾아 갔지만 일부는 부산에 정착하였다.

³⁾ 해방과 동시에 거대한 인구이동의 파도가 한반도를 덮쳤다. 해방 무렵 해외 거주 한국인은 300만 명이 넘 었다. 만주와 일본, 중국 남동부 해안지대와 내륙지대까지 많은 한국인이 나가있었고,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남양이라 불린 동남아시아와 필리핀 일대에도 군인이나 징용노무자로 끌려가 있었다. 해방 후 1 년 동안 이들 중 230만 명 이상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50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이 38 선을 넘어 월남했다(김귀옥, 1999: 68~70), 한편 일본의 조사에 따르면 1944년 말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 인은 1,936,843명이었는데, 1947년 9월에는 529,907명이 일본에 남아있었다. 대략 140만명 정도의 한국 인이 해방직후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최영호, 2003: 7). 그리고 1945.9-1949.9월 사 이 일본의 항구를 통해 부산항으로 들어온 한국인은 1,016,262명에 달했다(최영호, 2007.5: 272).

⁴⁾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는 모두 5만 9,037명의 이산가족이 등록돼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부산에 사는 이산가족은 2,782명으로 전체의 4.7%이다. 이산가족은 경기도 (29.7%)와 서울(27.3%), 인천(8.3%)의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다. 부산일보(2018.1.10: 9). 북한에서 남쪽으 로 내려온 사람들의 경우 고향이 가까운 수도권쪽으로 많이 이동하여 정착했던 것 같다.

⟨₩ 1	〉 1955년	인구총조사에서	저축지볔	전인시기볔	부산으로의	전인인구(명)
\ 	, ,,,,,,,,,,,,,,,,,,,,,,,,,,,,,,,,,,,,,		<u> </u>			

전출지별	전입시기별	전입인구	남	여
	계	154,509	82,321	72,188
741	8.15 이후	73,742	37,748	35,994
계	6.25 이후	42,592	23,497	19,095
	1.4 이후	38,175	21,076	17,099
	계	5,292	3,010	2,282
スコ	8.15 이후	4,687	2,567	2,120
중국	6.25 이후	530	396	134
	1.4 이후	75	82,321 72,188 37,748 35,994 23,497 19,095 21,076 17,099 3,010 2,282 2,567 2,120	
	계	109,723	59,044	50,679
브루니	8.15 이후	31,245	15,781	15,464
북한	6.25 이후	40,987	22,708	18,279
	1.4 이후	37,491	20,555	16,936
	계	39,071	20,039	19,032
이브	8.15 이후	37,573	19,267	18,306
일본	6.25 이후	970	339	631
	1.4 이후	528	433	95
	계	423	228	195
7151017	8.15 이후	237	133	104
기타외국	6.25 이후	105	54	51
지그, 트게리 트게어나	1.4 이후	81	41	40

자료: 통계청 통계연보 1955년 인구총조사

주: 전수조사임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귀환동포들의 비중은 엷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해방직후 국 제시장 즉 돗데기시장의 상권은 처음에는 귀환동포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즉 '한편 이 시장(국제 시장-인용자)을 움직이고 있는 상인들을 출신도별로 보면 돗데기시장 시대는 일본과 중국 기타에 서 모여든 귀환 동포들이 지배권을 장악하였는데, 거래되는 상품과 거래상인수가 급격히 증가하 여 당당한 시장으로서 행세하게 된 자유시장 이시대에는 경상도 원주민들도 차츰 진출하기 시작하 여 귀환 동포와 원주민들이 반반을 차지하였다(동아일보, 1952.2.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동 포와 북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비중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1960년대 말에 도 국제시장에서 이북출신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 시장은 이 지방상인이 50% 정도이고 기타 지방상인이 20%, 이북출신 상인이 30% 정도이다.'(매일경제, 1969.10.18).

그리하여 귀환동포와 월남동포 그리고 피난민은 해방직후 부산인구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 었다. 그리고 이들은 부산의 인적자본 형성과 정체성 형성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 '전쟁으로 북한을 비롯한 전국에서 주요기술과 기업 창의력을 가진 인물들이 부산에 내려와 인적자본이이 풍

⁵⁾ 해방직후 일본인들의 물자방매를 계기로 중구 신창동 4가 일대에 만들어진 돗데기시장은 1948년 자유시 장으로 불렸다가 1950년 국제시장으로 개칭되었다.

부하였다. 이들은 경영기술, 생산기술을 전수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는 부산의 1960년대 제조업 황금시기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박영구, 2005: 189).

그러나 이후 부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전후 부흥과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였 다. 1955년에 100만명이었던 부산인구는 1968년에 150만명을 넘어섰고, 겨우 4년 후인 1972년에 는 다시 50만명이 증가하여 200만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7년 후인 1979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7년 사이에 100만명이 늘어난 1970년대야말로 부산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다름아닌 고도성장기였다.

1985년 부산인구는 마침내 350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계속 늘어났다. 그 러다 부산인구가 최고치에 달한 것은 부산광역시로 출범하였던 1995년으로 3,892,972명이었다. 부산인구가 1995년까지 증가를 보였던 것은 1989년과 1995년의 시역확대의 영향이 컸다?). 만약 시역확대가 없었다면 부산인구는 좀 더 일찍 감소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이후 부산인구는 매 년 줄어들었는데, 2016년에는 355만명으로 이제 350만명 선이 위협을 받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부산인구 변동은 자연증가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특히 1970-80년대 부산 인구의 증감에 영향을 준 주된 요인은 자연증가가 아닌 사회적 증가였고 이러한 사회적 증가는 역 외 전출입의 결과였다. 즉 부산시역을 넘어서 인구가 들어오고 나가는 전출입을 통해 부산인구의 증감이 좌우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 증가세의 둔화가 가세하면서 부산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최은영·구동회, 2012.9). 이러한 인구의 추이 속에서 인구구성이 변화하고 인구학적 특성이 달라지면서 인적자본의 형성과 지역정 체성도 영향을 받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역외전출입의 추이

1. 전출입의 추이

<표 2〉는 1970-2018년 사이의 부산인구의 전출입 누계를 제시한 것이다. 1970년에서 2018년 기 간 동안 부산에서 타시도로 나간 전출인구는 8,517,968명이고, 전입인구는 8,491,380명으로 -

⁶⁾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던 동양고무(화승), 태화고무, 동성화학 등이 대표적으로 한국전쟁기 에 부산으로 옮겨온 기업들이다.

^{7) 1989. 1. 1}일 제5차 행정구역 확장으로 김해군 가락면, 녹산면, 창원군 천가면이 부산에 편입되어 면적은 526.00 ㎢으로 늘어났고 강서구가 설치(12자치구)되었다. 그러다 1995. 1. 1일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 변경이 되면서 기장군이 설치(15구, 1군)되고 면적은 748.92㎢로 늘어났다. 시역의 확대는 인구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데, 1989년에는 106,686명 그리고 1995년에는 46,428명의 증가가 있었다(http://www.busan.go.kr/bhhistory).

⁸⁾ 시역확대로 1989년에 106,686명이 늘어났던 부산인구는 1990년에 59,199명이 감소하였다가 1991년에 다시 94,707명의 증가가 있었다. 그러다 199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중 반은 부산경제의 중핵을 이루었던 신발산업 전체가 무너지면서 부산경제가 요동을 치던 시기였다.

26,588명의 인구수지 적자를 보였다. 1970년에서 2018년까지 부산의 전출입 인구 규모는 대체로 비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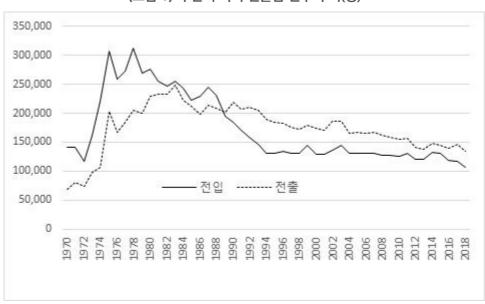
부산으로 전입 부산에서 전출 전입-전출 계 8,491,380 8,517,968 -26,588

〈표 2〉 1970-2018년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 계(명)

〈그림 1〉은 이러한 부산인구의 전입과 전출 추이를 그린 것이다. 전출입 모두 1970년대와 1980 년대에 왕성하게 일어났으며, 1990년 이후에는 그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인구이동이라 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1970-1980년대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였다. 그런데 1989년을 전기로 전출 과 전입추이가 역전되고 있다. 1988년까지는 전입〉전출이었던 것이 1989년부터는 전출〉전입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간에 한번도 바뀌지 않고 있다.

1988년까지 부산으로의 전입인구는 4.409.349명으로 전출인구 3.389.816명보다 무려 1.019.533 명이 많았다. 그리하여 1988년까지 부산은 타시도와의 인구유출입에서 1백만명이 넘는 흑자를 기 록하였다. 1989년부터는 그와 반대였다. 1989년에서 2018년까지 전입인구는 4.082.031명이었는 데 반해 전출인구는 5.128.152명으로 -1.046.121명의 순유출이 있었다.

1970-2018년 사이의 전출입 인구규모를 볼 때 1989년은 거의 정확히 중간에 있는 연도로 그 이 전까지의 흑자와 이후의 적자가 거의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970-1988년의 19년과 1989년 이 후 2018년까지 30년 동안의 전입초과와 전출초과인구는 거의 같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부산 으로의 전입 압력은 매우 거센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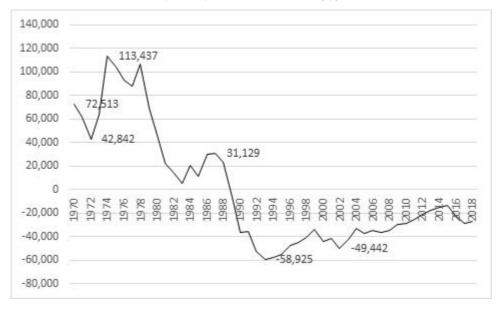


〈그림 1〉 부산의 역외 전출입 인구 추이(명)

〈그림 2〉는 순전출입 인구의 추이를 그린 것이다. 순전출입 인구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 은 부산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부산에서 타시도로 나간 인구가 더 많은 것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1970년대 순전입인구 규모는 매우 컸다. 1974년 순전입인구는 113.437명에 이르렀고 1975 년과 1978년에도 10만명이 넘는 순전입이 있었다. 1970년대 부사은 적어도 인구측면에서 본다면 광란에 가까운 시기였다. 여기에 자연증가까지를 합한다면 한해에 구크기 만한 인구가 늘어나는 폭발적 증가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을 전기로 순전출초과로 바뀌었다. 주지하다시피 1987년 이후 민주화와 함께 노 동운동이 고양되고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경공업은 큰 타격을 받기에 이른다. 특히 부 산의 주력산업이었던 신발산업에 불어닥친 도산의 회오리는 수많은 실직자를 만들어내면서 부산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일자리의 감소가 인구이동에 반영된 것이 1990년대 전반기의 전출 초과 흐름이었다. 순전출초과 인구는 1993년에 무려 58,925명에 이르렀는데, 1990년대는 줄곧 4-5만명대의 순전출을 기록하였다. 그러다 2000년대에는 3-4만명대 그리고 2010년대에는 2-3만 명대의 순전출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의 유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출입은 부산의 인구증감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자연증가분을 상회하는 순전출입인구 는 부산의 인구변동에서 자연증감보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증감이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림 3〉은 부산인구의 증감분과 순전출입인구를 그린 것인데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관계수는 0.88로 매우 강한 정의 상관을 보여준다.



〈그림 2〉 역외 순전출입 인구(명)

2. 전출입지별 구성

한편 〈표 3〉은 부산으로 들어온 전체 전입인구 가운데 전출지별로 누계와 그 비중을 보인 것이 다. 전체 전입인구 가운데 경남이 4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2.4%의 경북이었다. 그리고 서울 이 11.6%, 경기 6.9%, 전남 6.7%의 순이었다. 권역별로 본다면 경남/울산이 45.4%, 수도권 19.9%, 대구/경북 15.5%, 호남/제주 11.6%, 충청 5.0%, 강원 2.6% 순이었다. 영남권이 전입인구의 60.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도 대구 경상북도 광주 8.491.380 982.888 588.730 263.363 1.051.662 49.051 242.595 116.550 11.6 1.4 6.9 3.1 12.4 0.6 2.9 전라남도 제주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울산 571,754 119,926 60,526 153,548 209,329 218,843 3,626,994 233,37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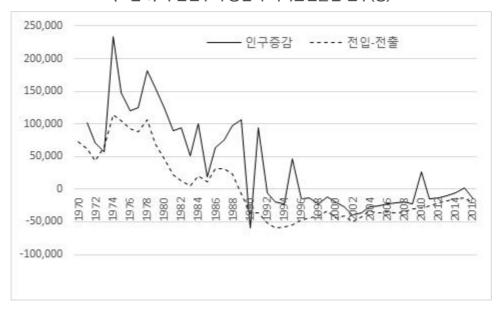
〈표 3〉 부산으로 전입인구의 전출지별 구성

(명, %)

2.7

0.7

6.7



〈그림 3〉 부산인구의 증감과 역외순전출입 인구(명)

2.5

2.6

42.7

한편 부산에서 나간 전출인구의 타시도별 전입인구 비중을 보면 역시 경남이 40.8%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이 17.8%의 서울이었다. 그리고 경상북도 9.2%, 경기 9.1%, 전남 4.6%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경남/울산이 44%, 수도권 28.6%, 대구/경북 12.4%, 호남/제주 8.5%, 충청 4.6%, 강원 2%

주: 세종특별자치시 2,246명, 0.0%가 있음

순이다. 부산으로의 전입인구의 전출지구성에 비해 부산에서 나간 인구에서 수도권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표 4〉 부산 전출 인구의 전입지별 구성

(명, %)

							(0, 1-7
전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8,517,968	1,519,851	148,605	770,997	268,455	780,361	56,474	150,037
100.0	17.8	1.7	9.1	3.2	9.2	0.7	1.8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389,844	117,288	82,456	118,728	187,142	171,339	3,478,441	273,175
4.6	1.4	1.0	1.4	2.2	2.0	40.8	3.2

주: 세종특별자치시 4.775명. 0.06%가 있음

한편 〈표 5〉는 권역별 순전출입을 계산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1970-2018년 동안 부산은 수 도권과는 2,439,453명의 전출과 1,688,168명의 전입인구를 기록하여 -751,285명의 인구수지 적자 를 기록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의 전출입에서는 모두 인구수지 흑자를 보았다. 호남 /제주권과는 269.683명의 흑자를 기록하여 가장 큰 인구수지 흑자를 보였으며, 이어 대구/경북에 서는 호남/제주와 거의 같은 266,209명의 인구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경남/울산 108,753명, 강 원 47.504 그리고 충청과는 32.548명의 인구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수도권과는 적자를 보였지만 다른 권역과는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26.588명의 순전 출이 있었다. 수도권으로의 전출초과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초과를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 이다.

〈표 5〉 권역별 전출입 계

(명)

	수도권			호남제주					
전출	전입	전입-전출	전출	전입	전입-전출	전출			
2,439,453	1,688,168	-751,285	1,048,816	1,315,025	266,209	713,643			
호님	· 참제주		충청권		강원				
전입	전입-전출	전출	전입	전입-전출	전출	전입			
983,326	269,683	393,101	425,649	32,548	171,339	218,843			
강원		동남권			전국				
전입-전출	전출	전입	전입-전출	전출계	전입계	전입-전출			
47,504	3,751,616 3,860,369		108,753	8,517,968	8,491,380	-26,588			

주: 1. 전출은 부산에서 타시도로 나간 인구, 전입은 타시도에서 부산으로 들어온 인구를 말함 2. 전입-전출은 순전입인 구를 의미하며 마이너스(-)의 경우 부산으로 들어온 인구보다 나간 인구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함

Ⅳ. 광역시도별 역외 전출입 추이

이 장에서는 각 광역시도와의 전출입 추이를 좀 더 상세히 검토하여 광역시도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1. 광역시도별 기간별 추이

먼저 역외전출입 인구를 기간별로 살펴보기 위해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전출입인구 총계를 보면 무엇보다 1970년대의 엄청난 순전입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다 1980년대에는 순전입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가 1990년대부터는 순전출로 접어드는데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순전출인구는 매우 컸다. 그러다 2010년대에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순전출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과의 전출입에서는 각 기간 모두 전출초과가 지속되었는데 특히 1970년대의 전출초과가 컸다. 부산으로 다른 광역시도의 인구가 몰려들던 시기에 서울로는 매우 많은 전출이 있었다. 많은 유입인구로 인한 엄청난 인구증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1970년대 부산인구의 서울 유출은 대단한 규모였다. 경기도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순전출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서울과 경남에 이어 세 번째였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기업이 밀집되면서 부산에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경기로 대거 밀려갔음을 시사한다.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강원 등은 농촌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도로서 공통된 패턴을 보인다. 1970년대에 폭발적인 부산으로의 전입인구를 발생시켰고, 1980년대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가 1990년대부터는 오히려 부산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흐름이다. 그러나 전출초과의 흐름은 전혀 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경북의 경우 1970년대에는 205,669명의 순전입이 있었지만, 1990년대에는 -9,331명의 순전출이 있었을 뿐이다.

경남은 부산에 인접한 도로서 다른 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도 차이를 보인다. 우선 그 규모가 타시도를 압도한다. 1970년대 경남으로부터의 순전입인구는 471,273명에 달했으며, 1990년 대에는 -239,004명의 순전출이 있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도 최대의 순전출을 보이고 있는 도가 다름 아닌 경남이다. 경남의 경우 일자리로 인해 부산과 전출입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부산의 광역화로 인한 인구이동이 결합되어 있다. 특히 부산기업들의 역외이전이 집중된 양산과 김해로의 인구이동은 부산광역화의 산물이라 할 있다(김대래, 2016A).

〈丑 6〉 ノ	l가별 각	시도와의	순전출입	총괄
---------	-------	------	------	----

(명)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8	전체
전국	815,437	197,438	-460,672	-381,941	-196,850	-26,588
서울	-151,181	-156,531	-90,838	-98,223	-40,190	-536,963
인천	0	-6,925	-12,800	-8,557	-3,773	-32,055
경기	-5,990	-27,613	-54,033	-69,703	-24,928	-182,267
대구	0	622	-8,961	567	2,680	-5,092
- 경북	205,669	90,140	-9,331	-9,596	-5,581	271,301
광주	0	-21	-6,959	-758	315	-7,423
전북	71,619	23,811	-1,534	-529	-809	92,558
전남	109,903	73,980	889	-832	-2,030	181,910
제주	11,048	4,641	-5,121	-2,542	-5,388	2,638
대전	0	-869	-12,095	-6,189	-2,777	-21,930
세종	0	0	0	0	-2,529	-2,529
충북	34,031	12,144	-4,850	-3,723	-2,782	34,820
 충남	38,306	9,943	-7,492	-10,760	-7,810	22,187
강원	30,759	18,671	618	-1,966	-578	47,504
경남	471,273	155,445	-239,004	-144,328	-94,833	148,553
울산	0	0	-9,161	-24,802	-5,837	-39,800

2. 광역시도별 연 순전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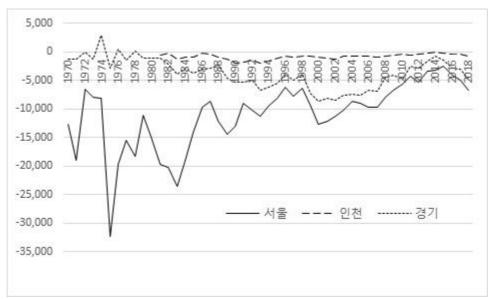
여기서는 매 년도의 광역시도별 전출입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그림 4〉에서 보듯이 서울과의 순전출입 추이는 매우 활발하였다. 특히 1970-80년대 서울로의 순전출규모는 아주 컸다. 〈그림 4〉와 〈그림 5〉를 보면 서울과 경북은 거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은 부산과의 전출입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광역도인데, 서울은 이러 한 전형적인 모습과 완전히 반대이다. 근년에 들어와 부산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논의들이 많 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더욱 많은 인구의 유출이 있었던 것은 1970년대였고, 그 가운데에는 인 재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인천과는 1981년부터 별도 통계로 잡히는데, 서울과 마찬가지로 한번도 전입초과를 기록하지 못하였다. 비록 인천과의 인구유출입 규모는 크지 않아 총전출초과 규모도 32,055명에 불과하지 만, 인천과의 인구 전출입에서도 서울과 같은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경기도와의 인구전출입 동향 도 거의 비슷하였다. 다만 1974년, 1976년 그리고 1978년에 전입초과를 기록하였는데, 이 시기는 부산이 전국으로부터 인구를 대거 흡입하던 기간이었다. 이 몇 년 동안 경기도에서도 부산으로의 유입초과가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연도에는 모두 부산에서 경기도로 순전출이 있었다. 상대적으

로 농촌지역인 경기도까지 인구유출입에서 서울과 같은 경향을 보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전체적 으로 볼 때 부산은 수도권과의 전출입에서는 모두 전출초과를 보이는 구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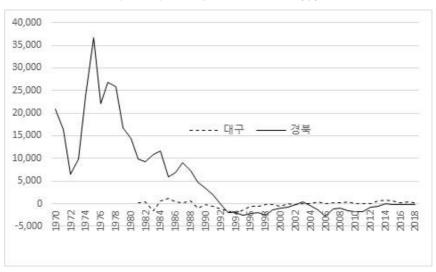


〈그림 4〉 수도권 시도와의 순전출입(명)

2) 대구와 경북

대구와의 인구전출입에서는 순전입과 순전출이 교대로 나타나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5,092명의 순전출이 있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또한 전출입 인구의 절대규모도 작았다. 대구로의 전출인구는 연평균 7.065명, 연평균 전입인구는 6.931명으로 각 1만명 이하였 다. 반면 경북은 매우 격심한 변동을 보였다. 1970년대 경북으로부터 부산으로의 순전입규모는 매 우 컸다. 1980년대로 들어가면서 순전입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어 1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경북과의 전출입에서 부산은 271,301명의 인구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그러다가 경북으로 의 전출초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였다. 총전출초과가 198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 한 것에 비하면 경북으로부터는 그 이후에도 3년이나 더 순전입이 있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농 촌을 낀 광역도로부터는 좀 더 늦게까지 순전입이 유지되었다. 이것은 다른 농촌지역 광역도에서 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그림 5〉 대구 경북과의 순전출입(명)

3) 호남과 제주

광주와의 전출입통계는 1986년부터 잡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동향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1989년부터 광주와의 전출입에서에서 순전출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광주는 서울이나 대구와는 다른 경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농촌지역을 가지고 있는 도와 유사한 전출입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9년 이래 부산은 광주와의 전출입에서 거의 대 부분 전출초과를 보였지만 근년에 들어와 전입초과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1986년 이래 전기 간 동안 7,423명의 순전출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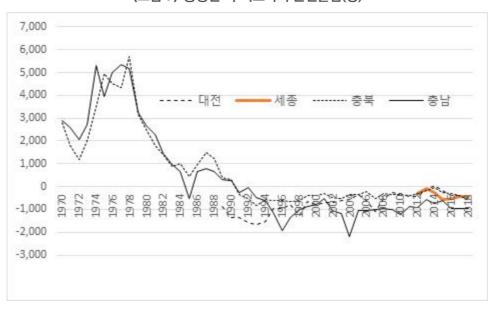
〈그림 6〉 호남 제주권 지역과의 순전출입(명)

전라북도와의 전출입은 경북보다도 한해 늦은 1993년에 순전출이 나타난다. 한해 1만명이 넘는 순전입이 있기도 하였던 전북과의 전출입은 근년에는 거의 미미한데 전기간 동안 92,558명의 순전입이 있었다. 전라남도와의 전출입은 규모가 크고 가장 늦게 까지 순전입이 있었다. 1994년에서 야 약간의 순전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에도 순전출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전체 기간 동안 전남으로부터는 181,910명의 순전입이 있었다.

제주와의 전출입도 규모는 작지만 역시 전형적인 패턴의 일환을 보여준다. 1988년까지는 순전입이 있었고 1989년부터는 순전출이 있었다. 총전출입의 합계는 2,638명의 순전입이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제주와의 전출입에서 부산은 흑자를 기록하였다. 9)

4) 충남북 및 대전과 세종

대전과는 1989년부터 통계가 확인가능한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과 함께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1989년 이래 지속적으로 순유출이 있는 것은 전형적인 모습의 일환이다. 순유출의 규모는 21,930명에 달한다. 그러나 대전과의 전출입에서 본 전출초과는 대구나 광주에 비해 상당히 크다. 도시규모를 고려할 때 대전과의 인구유출입에는 대구나 광주와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시사 한다. 게다가 2014년의 40명의 흑자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순유입이 없었다. 대전이 과학기술연구 의 중심이라는 특성이 인구이동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2012년부터 통계가 분리된 세종과의 전출입도 규모는 작지만 모두 순전출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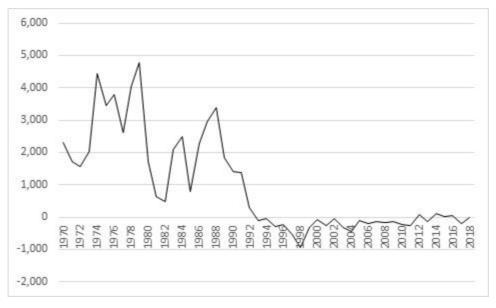
〈그림 7〉 충청권 각 시도와의 순전출입(명)

⁹⁾ 제주출신은 특히 영도로 많이 이주하였다. 영도 인구 가운데 제주 출신은 전체의 25~30%에 달한다(부산 일보, 2018.5.29.).

충북과 충남은 농촌지역으로서 많은 전입인구를 보이다가 뒤늦게 전출초과를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 충청북도는 1991년부터 작지만 순유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몇 백명 규모의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 기간으로는 34,820명의 순유입이 있었다. 충청 남도도 거의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례적으로 1985년에 516명의 순유출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순유출은 1991년부터 나타난다. 순유출의 크기는 충북보다 좀 더 커서 부산으로의 전입규모가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 기간의 순유입은 22.187명으로 충북보다 작게 나타난다.

5) 강원

강워도와의 전출입도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 1993년부터 순유출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앞 선 시기의 순유입규모에 비하면 순유출규모는 매우 작다. 게다가 특이하게도 2014년 이래 수년 동 안 순전입이 나타나고도 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와의 전출입 인구는 거의 차이가 없다. 전기간 동안 순전입인구는 47.504명으로 충북이나 충남에 비해서도 순전입 인구의 규모가 크다. 강원도 의 경우 절대적인 전출입 인구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부산에서 강원도로 가는 전출인구가 많지 않 았던 탓에 순전입인구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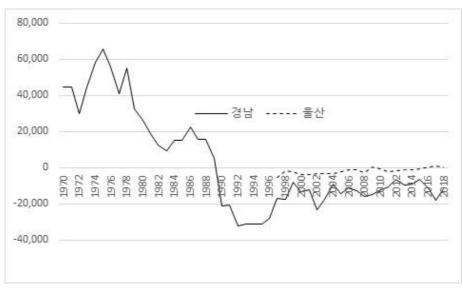
〈그림 8〉 강원도와의 순전출입(명)

6) 경남과 울산

울산과의 전출입 통계는 1997년부터 나타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 순전출을 보였다. 울 산은 한국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이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모든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흡입하였다.

부산에서 울산으로의 전출도 그러한 일자리의 영향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순전입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울산인접 지역에 신도시의 조성으로 울산인구들이 부산으로 분산된 영향으로 보여진다. 전 기간 동안 울산과의 전출입에서는 39.800명의 순전출을 기록하였다.

부산과 인접한 경남과는 가장 많은 전출입이 있었다. 3,478,441명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나갔고 3,626,994명의 사람들이 경남으로부터 부산으로 들어와 전체 기간 중 148,553명의 순전입이 있었다. 1990년부터 순전출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거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 1만명이 넘는 순전출이 지속되고 있다¹⁰⁾. 전출입 인구 규모에 비해 순전입 인구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부산에서 경남으로의 전출인구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남에서 부산으로 왔던 사람들이 다시 대부분 경남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산인구의 경남으로의 이동에는 부산기업의 역외이 전으로 인한 분산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부산에서 나간 기업의 약 2/3가 양산과 김해에 입지하였는데 이러한 기업의 분산이 인구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김대래, 2016A).



〈그림 9〉 경남 울산과의 순전출입(명)

V. 시사

1. 부산인구 구성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은 부산인구의 증감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¹⁰⁾ 특히 사하구 같은 경우 남해출신들이 매우 많아 전체 구민의 17%에 달한다고 한다(부산일보, 2018.2.7). 19%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국제신문, 2018.6.13).

그로 인해 부산인구의 출생지별 구성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엄청난 사회적 이 동으로 부산인구의 출생지별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인구총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은 2000년 총인구조사에 나타난 부산인구의 출생지별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전 체인구에서 부산출생이 절반인 50.8%를 점하고 있다. 부산출생 인구가 부산인구의 절반을 점한 것은 2000년 인구총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절대수 자체에서 부산출생 인 구가 절반을 점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연령대를 고려하면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30대 이상을 보면 부산출생 비중은 급격히 낮아진다. 30대 38%, 40대 29.2%, 50대 19.4%, 60대 16.5% 그리고 70대 이상은 17.9%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11)에서는 66.8%로 30대와 매우 큰 단층을 보인다. 부산출생자 비중이 낮은 것에 반비례하여 경남출신 인구와 경북출신 인구의 높은 비중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그 뒤를 전남을 비 롯한 호남출신 인구가 잇고 있다.

2000년 현재 40세는 1960년 생으로 베이부머 세대에 해당하며 이 세대들이 1970년대 이래의 고 도성장기에 부산으로 대거 이주하였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해방직후와 한국전쟁기를 통해서도 많은 타시도 사람들이 부산으로 왔었지만, 고도성장기 부산인구의 중심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이 들 보다는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온 사람들이었다12).

반면 서울출신 비중은 매우 낮았다. 전체 인구에서 점하는 비중은 1.9%인데 특히 40세 이상에 서는 더 낮아져 5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광역도보다 낮은 구성을 보이고 있다. 경남과 경북 다 음으로 많은 전입인구가 있었던 서울출생자 비중이 이렇게 낮은 것은 서울의 경우 특이하게도 부 산으로 전입하였던 인구들이 그대로 다시 서울이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천과 경기의 비중 또한 전입인구 비중에 비해 낮은데 부산으로 왔던 인천과 경 기 출생자들 또한 상당수가 다시 부산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가장 많은 전입인구를 보인 경남은 전출에서도 가장 큰 인구규모를 보였음에도 불구 하고 부산인구의 구성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경남출생 자들이 부산으로 대거 이동하여 부산에 많이 정착하였음을 말해준다. 반면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 동한 인구 가운데에는 경남출신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부산으로 전입하였던 인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 이면에는 경제개발기 초기에는 많은 경남출신들이 부산으 로 일자리를 찾아 들어왔지만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경남과 울산이 산업단지로 되면서 경남으로 옮겨가려는 압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11) 2000}년 기준 25세의 출생연도는 1975년이다. 1970년대 부산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동일연령대 부산인구 의 중심을 이루면서 성장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¹²⁾ 이러한 추이는 2005년 인구총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5년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부산출생 자의 비중이 더 낮고 타시도 출생자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확인된다. 30대 이상에서는 부산출신 비중이 경남출신보다 낮았다.

〈표 7〉 부산인구의 출생지별 연령대별 구성

(%/2000)

	전국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울특별시	1.9	1.6	2.3	2.5	2.2	1.7	1.6	1.0	0.7
부산광역시	50.8	89.9	82.9	66.8	38.0	29.2	19.4	16.5	17.9
대구광역시	1.3	0.7	1.0	1.3	1.6	1.6	1.5	1.4	1.4
인천광역시	0.3	0.3	0.3	0.3	0.3	0.3	0.3	0.2	0.2
광주광역시	0.3	0.1	0.2	0.3	0.3	0.4	0.3	0.2	0.2
대전광역시	0.3	0.2	0.2	0.2	0.3	0.3	0.3	0.2	0.2
울산광역시	1.4	0.8	1.1	1.1	1.0	1.5	2.2	2.9	3.2
경기도	0.9	0.9	0.9	0.8	1.1	1.0	0.9	0.8	0.8
강원도	1.4	0.2	0.7	1.4	2.5	2.0	1.5	1.5	1.3
충청북도	1.1	0.1	0.3	0.7	1.5	1.8	1.7	1.7	1.7
충청남도	1.0	0.1	0.2	0.6	1.3	1.8	1.8	1.6	1.5
전라북도	1.5	0.1	0.4	1.1	2.2	2.4	2.5	2.1	1.9
전라남도	4.3	0.3	0.9	3.1	6.7	6.9	7.0	5.7	5.1
경상북도	8.7	0.8	2.0	5.1	11.1	14.0	15.1	14.7	15.4
경상남도	22.6	3.5	6.2	14.2	29.2	34.5	37.8	38.1	38.3
제주도	0.5	0.1	0.2	0.4	0.7	0.6	0.8	0.9	0.8
기타	1.7	0.2	0.1	0.1	0.1	0.1	5.2	10.3	9.0
미상	0.0	0.0	0.0	0.0	0.0	0.0	0.1	0.1	0.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주: 1. 2000년 인구총조사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자성 2. 10% 표본조사 3. 70세 이상 인구에는 연령미상 94명 포 함되어 있음

특히 부산제조업의 쇠퇴와 경남 및 울산의 제조업 성장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은 부산과 경남 및 울산간의 인구이동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정점에 이른 부산의 제조업은 1987년 에 43만명의 제조업 종사자를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경남과 울산은 중화학공 업화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적지않은 부산의 인구가 경남 및 울산에 서 창출되는 고용에 이끌려 경남 및 울산으로 이동하였다. 특히 부산인구의 경남 및 울산으로의 이동은 1990년대 이후 부산의 제조업이 두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상승한 실업률을 완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일례로 1999년 외환위기를 겪을 때 부산의 실업률은 전국과 경남권에 비해 매 우 높았다. 이러한 실업률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2003년까지 인구의 역외 이동이 30퍼 센트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권기철, 2006, 9: 97-123).

이에 더하여 부산의 주택난 및 교통난 그리고 부산기업의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인한 광역 화가 가세하면서 경남으로의 이동이 더욱 확대되었다(김대래, 2016A: 174-206). 한편 부산의 인구 감소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부산의 교외화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구동회, 2007.12: 930-939).

2. 인적 자본 축적에의 영향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에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흐름은 수도권으로의 일방적 전출초과와 타시 도로부터의 전입초과라는 상반된 경향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수도권으로는 1970년부터 매년 순 유출이 있었는데 특히 부산인구가 급증하고 타시도로부터 엄청난 유입초과가 있었던 시기에 크게 발생하였다. 농촌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대신 수도권으로는 끊임없이 인구가 유출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선 부산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농촌지역을 가진 광역도로부터 받아들이는 구조였다. 반면 수도권으로는 끊임없이 전출 초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산이 갖지 못한 산업으로 많은 고급인력들이 유출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구의 전출입이 알려주는 주요한 사실은 부산은 경공업에 필요한 인력을 얻는 대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인력을 유출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도성장기 부산경제가 활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인적자본의 축적이라는 점 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이것은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때문이었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부산이 인적자본에서 애로를 겪 는 원인이 되었다(박영구, 2005: 189).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은 전출인구가 크게 줄어든 시기에도 계속되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해 실 증되고 있다. 부산으로부터 전출하는 이동 가구의 특성과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선택성을 분석 한 연구도 그러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부산에서 유출되는 가구의 가구 주는 25~34세 연령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비이동 가구에 비해 이동 가구는 가구주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가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였다. 둘째. 연령과 학력에 따른 인구이동의 선택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10대와 20대의 전출 초과 규모가 크며, 비이동자에 비해 이동자가 고학력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인구 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부산은 인구가 과도하게 유출되고 있는 양적 문제와 함께 두뇌유출이라는 질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최은영·구동회·조순기, 2010.4: 123-136).

3. 정치적 성향에의 영향

광역시도별 전출입 인구의 차이는 부산시민들의 출생지별 구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부산의 정체 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으로의 전입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했던 것은 경남이고 그 다음은 서울 그리고 경북 순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온 전입인 구는 대부분 수도권을 비롯한 타시도로 전출하였음을 보았다. 또한 경남으로 많은 전출인구들이 나가 순전입인구 규모에서는 경상북도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출생자의 비중은 대단히 높 았다.

그 결과 30대 이상의 부산의 인구구성에서는 경남과 경북/대구 출생비중이 매우 높은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호남출신이 많았다. 그러나 호남출신 비중은 경북/대구 비중보다

낮았다. 이러한 인구구성은 정치성향에서 출신지역의 정치적 태도를 일정정도 닮아가는 역할¹³⁾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 3당 합당이후 부산이 각종 선거에서 보인 정치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대구/경북과는 약간 차별을 보였다14).

Ⅵ. 결론

이상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부산에서 타시도로 나간 전출인구는 8.517,968명, 전입인 구는 8,491,380명으로 -26,588명의 인구수지 적자를 보였다. 전출입 모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왕성하게 일어났으며 1990년 이후에는 그 규모가 절반수준이었다. 전기간 수도권과는 항상 순전 출을 보였으며,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전입초과를 보였다. 크게 보아 부산은 광역도로부터 인구를 받아들이고 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출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역외전출입에서 분수령적 의미를 갖는 연도는 1989년이었다. 그 이전까지 부산은 항상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았다. 그러다 1989년을 전기로 전출초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1987 년 이후 민주화와 함께 노동운동이 고양되고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부터였다.

셋째, 부산으로 들어온 전체 전입인구 가운데 경남이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4%의 경북이었다. 그리고 서울이 11.6%, 경기 6.9%, 전남 6.7%의 순이었다. 부산에서 나간 전출인구는 경남 40.8%, 서울 17.8, 경상북도 9.2%, 경기 9.1%, 전남 4.6%의 순이었다. 전출입 구성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남의 압도적인 비중 그리고 전입에 비해 전출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점하는 수도권의 동향이었다.

이러한 특징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에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흐름은 수도권으로의 일방적 전출초과와 타시도로부터의 전입초과라는 상반된 경향이었다. 이러한 전출입 결과는 부산인구의 출생지별 구 성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부산인구에서 경남과 경북이 높은 비중을 점하게 되고 그 뒤를 호남인구가 잇는 구조가 형성된 것은 바로 전출입의 산물이었다. 전출입을 통해 형성된

¹³⁾ 부산광역시장 선거에서 세대별 투표성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세대별 투표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5회 선거(2010년)때 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지역투표가 지배하였다(김대래, 2016B: 87).

^{14) 1987}년의 대통령선거 그리고 1990년 3당 합당이후 부산의 선거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지역정서가 작용하였다. 영남지역주의는 부산에서도 강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 계열에 대한 지지는 매우 느리게 확대되어 왔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부산에서 받은 득표율은 9.1%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은 호남출신 인구비중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었다(최 원석, 2015: 187-212) 및 최원석(2016: 140-156). 그런데 부산의 영남지역주의는 대구에 비해서는 다소 약했는데, 이것은 호남출생 인구가 부산에서는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부산인구의 출신지별 구성은 부산의 정치 성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출입 분석 결과 농촌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대신 수도권으로는 끊임없이 인구가 유출되었다. 이것은 부산의 인적자본 축적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로 부산에서 타시도로 특히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인구의 경우 연령과 학력에 따른 이동의 선택성 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같은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의 전입초과에서 전출초과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전체로는 1989년을 기점으로 전출초과로 돌아섰지만 농촌지역을 가진 도 에서는 그 이후에도 몇 년 계속 전입초과였는데 도에 따라 시기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공업화 가 더뎌 좀 더 농촌적 색채를 많이 가질수록 과잉인구 배출요인이 컸던 만큼 부산으로의 전입초과 가 더 오래 계속되었다.

넷째, 경남 및 울산과의 인구 전출입에서는 광역화가 중요한 하나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기 업의 이전과 출퇴근 그리고 주택가격의 상승과 교외화 현상은 인구 전출입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 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와 시사가 제시하는 정책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전출입은 일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산이 인구감소를 억제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좋은 일자리 확보에 정책의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구전출입의 또 다른 주요한 측면은 광역화였다. 부산과 함께 경남과 울산을 포함한 광 역경제권 차원에서 일자리는 물론 교통과 주택 등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이제 부산출생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인구의 부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정체성의 확립과 이것을 부산발전의 기초로 활용하는 정책적 고려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역외 전출입 규모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의 유출은 여전 히 부산의 주요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 인적자원 유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향후 부 산발전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기철. (2006.9). 부산광역권의 제조업 고용 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 및 인구이동의 균형화 효과, 『경제연구』제24권 제3호. 97-123. 경산: 한국경제통상학회.
- 권기철. (2006). 부산-경남권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영논집』. 제21집. 14-32.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연구소.
- 구동회. (2007.12). 부산권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2권 제6호 통권 123호. 930-939. 서울: 대한지리학회.
-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 연구총서 12. 1-529.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대래 외. (2005.10).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한국민족문화』제26집. 283-319. 부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김대래. (2016A). 부산권 기업의 역외 이전과 경제의 광역화, 주수현 외 지음, 『부산글로벌 경제론』. 74-206.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김대래. (2016B). 저출산 고령화와 세대별 투표: 역대 부산광역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부산연구』 제14권. 67-94. 부산: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 김대래. (2017). 부산출생 대학생 설문조사에 나타난 부모의 고향 -2014-2017년 조사의 분석. 신 라대학교 부산학센터, 『부산연구』제15권 제2호. 98-114. 부산: 누리.
- 동남지방통계청. (각년도). 『동남권 인구이동통계』.
- 박영구. (2005.12). 『현대부산의 제조업 1945-2000: 통계와 발전』. 1~413.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박영구. (2010). 부산의 제조업: 충격과 대응. 『한국전쟁과 부산경제: 경부성장축의 강화』. 27~72. 서울: 해남.
- 주수현 외. (2016). 『부산 글로벌 경제론』. 1-533.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최은영·구동회·박영실. (2009.10).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1: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한국지역 지리학회지』. 제15권 제5호 통권 57호, 572-589, 경산: 한국지역지리학회.
- 최은영·구동회·조순기. (2010.4).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제2 호 통권 60호. 123-136. 경산: 한국지역지리학회.
- 최은영· 구동회. (2012.9). 부산의 인구 변동 요인과 인구 구조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제46권 제 3호. 333-345. 서울: 국토지리학회.
- 최영호. (2003.9).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6집, 5-49, 과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최영호. (2007.5). 일본의 패전과 부관연락선: 부관항로의 귀환자들, 『한일민족문제연구』. 243-287. 부산: 한일민족문제연구회.
- 최영호. (2009.6). 해방직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인 귀환, 『항도부산』 24호. 91-130. 부산: 부산시사 편찬위원회.
- 최원석. (2015). 부산정치의 역동성과 변화 가능성.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부산학개론』. 187-212. 부산: 호밀밭.
- 최원석. (2016). 부산의 정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부산학』. 140-156. 부사: 누리
- 「국제신문」. (2018). 6.13.
- 「동아일보」. (1952). 2.29.
- 「매일경제」. (1969). 10.18.
- 「부산일보」. (2018). 1.10:9.
- 「부산일보」. (2018). 5.29.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bhhistory)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index/index.do)

김대래(金大來): 1988년 부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신라대학교 무역경제학부 교수 로 있다. 부산경제사 및 부산학에 관해 연구를 해오고 있다. 『부산귀속사업체 연구』(2006), 『부산의 기업과 경제』(2013), 『부산의 산업과 경제』(2017) 등의 저서와 '개항기 일본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인식'(공저/ 『역사와 경계』/2014.12.31), '한국전쟁 전후 부산 제조업의 입지 및 업종변화'(『항도부산』/2014.5.31), '경제 개발 초기 부산제조업에 관한 미시적 분석-1962년 『부산상공명감』의 분석을 중심으로-(『항도부산』 /2019.2.28) 등의 논문이 있다(drkim@silla.ac.kr).

Abstract

Migration of the Busan Population with Other Provinces during the 1970–2018 and It's Implication

Kim, Dae-Rae

This paper analyzed the migration of the Busan population during the 1970-2018. Until 1989 the people who moved into Busan from other provinces were more than those people who migrated into other regions from Busan. But the trend was reversed since 1989. This was related to the slump of the Busan economy due to wage increases since the late 1980s. Of the total population who moved to Bu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accounted for 42.7 percent, followed by North Gyeongsang Province with 12.4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who left Bu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accounted for 40.8 percent, 17.8 percent in Seoul, 9.2 percent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9.1 percent in Gyeonggi Province, and 4.6 percent in South Jeolla Province. From these we can find the following:

First, population transfers served as a decisive role to change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in Bu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ook a high share, followed by the Honam population. The population structure also affected the political orientation and identity of Busan.

Second, the ratio of Seoul origin in Busan population is very low because most of them transferred back to Seoul or other cities. In contrast, although South Gyeongsang Province has an overwhelming share in both the transfer in and out, the composition of the South Gyeongsang Province is very high.

Third, the strongest flow in population migration was transfer to the Seoul area from Busan. Also from provinces which has rural areas many people pushed into Busan. Instead of a large influx of people from rural areas, the population was constantly leaked into the Seoul area, which adversely affected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in Busan.

Key Words: Busan, population, migration, identity, human capital